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對인도 정책 전망과 시사점

한형민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hmhan@kiep.go.kr, Tel: 044-414-1230)

김민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kmh@kiep.go.kr, Tel: 044-414-1257)



차 례

1. 대(對)인도 정책 방향
2. 분야별 주요 정책
3.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요 파트너국으로 인식함.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하여, 핵심 협력 대상국인 인도와의 정책공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됨.
 - 미·인 관계는 쿼드하에서 미국 우방국과 인도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다자주의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후 쿼드 외무장관 및 정상 회담을 신속히 개최하였고, 미·인 양국 행정부 장관의 상호 방문 교류를 통하여 협력 방향을 논의함.
- ▶ 바이든 행정부의 대인도 정책은 다자주의와 친환경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양국의 군사·안보 연계성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 코로나19 백신 및 의료용품 지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군사·안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인도는 군사 합동훈련 및 정보 교환 등 군사협력 확대를 합의하였고, 쿼드를 통한 다자 합동훈련, 핵심 신기술 및 기술표준 개발 공조 합의 등 군사·안보 관련 협력을 증대하고 있음.
 - [기후·에너지] 미국과 인도는 기후변화 대응 및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기술·재정 협력을 담은 쿼드 '기후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하였으며, 이후 미국의 존 케리 기후특사가 인도를 방문하여 모디 총리와 청정에너지 관련 미국의 재정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
 - [코로나19] 미국과 인도는 코로나19 공동 대응 및 백신 제조역량 확대를 위한 쿼드 '백신 실무그룹' 형성에 대해 합의하였고, 인도 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백신 원재료 수출의 긴급 승인과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진단 키트(RDT), 산소호흡기, 개인 보호장비(PPE) 등을 공급함.
-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인·태 전략 주요 파트너국인 인도와 안보, 재생에너지, 백신을 중심으로 협력의 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기업과 정부는 미·인 양국의 협력 방향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및 정책공조가 필요함.
 - 미·인 양국 협력은 쿼드 및 우방국과의 협력하에 안보, 재생에너지, 백신 분야 협력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은 에너지, 5G, 인프라, 백신 분야의 공동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미·인 양국에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미국의 대인도 무역적자 문제, 인도의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및 인권에 관한 강경한 기조는 양국간 높은 수준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1. 대(對)인도 정책 방향

■ [미·인 관계]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인도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요 파트너국’으로 인식함.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인도 모디 총리와의 첫 통화(2021. 2. 8)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이하 인태) 지역의 안보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항행의 자유, 영토의 온전성(territorial integrity), 쿼드를 통한 지역 질서 구축 등을 언급함.¹⁾
- 바이든 행정부의 대인도 인식은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인태 전략을 계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고려한 인사가 기용됨.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인태 지역을 언급하면서 인도를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에서는 미·인 사이버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과 디지털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여성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에너지 분야에서는 인도 국경간 전력 거래 활성화 지원을 △인프라 분야에서는 물 공급, 위생시설, 태양광 발전소 건설 차관 제공 등 다양한 양자 협력을 진행함.²⁾
 -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으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구상했던 커트 캠벨이 임명되었으며, 향후 인태 지역 국가와 외교·경제·안보 등의 다자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신뢰 구축 및 대중 견제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 이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당시 인도계 미국인을 위한 어젠다를 발표하고, 인도계 미국인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부통령으로 임명하는 등 인도계 미국인에 대한 지지를 보여줌.³⁾
 - ※ 본 어젠다는 힌두교, 시크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도계 미국인에 대한 지지와 그린카드 및 종교 노동자 단기 비자(R-1) 발급 확대, 언어장벽 개선 지원 등 인도계를 포함한 이민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밝히고 있음.

■ [다자간·양자간 협력 확대] 바이든 행정부의 미·인 관계는 쿼드하에서 미국 우방국과 인도의 연계성을 높이는 다자주의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양자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행정부 인사들의 교류 및 논의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⁴⁾

- 2021년 3월 12일 바이든 대통령이 개최한 쿼드 첫 정상회담에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태 지역’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기술 및 기술표준 개발,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 백신 등에 있어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그룹 형성에 합의함(표 1 참고).⁵⁾

1) The White House(2021. 2. 8), “Readout of President Joseph R. Biden, Jr. Call with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of India,”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2/08/readout-of-president-joseph-r-biden-jr-call-with-prime-minister-narendra-modi-of-india/>(검색일: 2021. 6. 9).

2) The U.S. Department of Defense(2019),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p. 4.

3) “Joe Biden’s Agenda for the Indian American Community,” <https://joebiden.com/indian-americans/>(검색일: 2021. 6. 8).

4) 미국, 인도, 일본, 호주로 이루어진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이하 쿼드)는 2004년 쓰나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이후 대중 견제 및 인태 지역 내 4국의 협력 확대가 주로 논의되었으나, 본 정상회담의 성명에서 직접적인 대중 견제 발언은 없었음.

5) The White House(2021. 3. 12), “Quad Leaders’ Joint Statement: “The Spirit of the Quad,””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3/12/quad-leaders-joint-statement-the-spirit-of-the-quad/>(검색일: 2021. 3. 15).

- 참여국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통적인 도전에 대해 언급하며, 공동의 흥미와 가치를 바탕으로 한 핵심적인 신기술 및 기술표준 개발 공조를 위한 ‘핵심적 신기술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함.
- 또한 쿼드 참여국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으며, ‘기후 실무그룹’ 형성을 통한 적극적인 공조에 합의함.
- 참여국들은 코로나19 공동 대응 및 백신 제조역량 확대를 위한 ‘백신 실무그룹’ 형성에 합의하였고, 과학자와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백신 실무그룹을 통해 쿼드 백신 파트너십을 이행할 예정임.
-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모디 총리와와의 통화 및 쿼드 정상회담, 미국 존 케리 기후특사와 오스틴 국방장관의 인도 방문, 인도 자이산카르 외무장관의 미국 방문 등 양국 행정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한 협력 확대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21년 5월 24~28일 인도 수브라마남 자이산카르 외무장관은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 토니 블링컨 외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과의 회의에 참석함.⁶⁾⁷⁾
- 이번 방문에서 미국과 인도는 코로나19 백신 파트너십, 기후변화 대응 공조 등을 강조하며 미·인 협력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함.⁸⁾

표 1. 쿼드 실무그룹의 역할 및 백신 파트너십의 주요 내용

핵심적 신기술 실무그룹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Working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설계·개발·사용에 대한 원칙 성명(a statement of principles) 개발 - 기술표준 개발에 대한 협력 촉진 · 쿼드 참여국들의 국가 기술표준 마련 · 역외 파트너들과의 공조 포함 - 통신 개발, 장비 공급업체의 다변화, 미래 통신 분야 등에서의 협력 장려 · 민간 부문 및 산업과의 긴밀한 협업 - 핵심적이고 새로운 기술 개발 관련 기회 및 트렌드 모니터링 협력 촉진 · 바이오 기술 포함 - 주요 기술 공급망에 대한 대화 소집
기후 실무그룹 (Climate Working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협정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역내외 국가들과의 협력 - 전 세계적인 대응(action) 지원, 개선 및 강화를 위한 역내외 협업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배출 기술력(low-emissions technology) 향상 - 기후 완화, 적응, 복원력, 기술, 역량 구축 및 기후재정 협력
백신 실무그룹 (Vaccine Working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백신 협력을 위한 이행계획 설계 - 지역에서의 백신 집행(administration)을 지체시키는 애로요인 확인 -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분배를 위하여 금융업자 및 제조시설과의 협업 - 인태 지역의 보건 안보와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계획 공유 · 특히 지원이 필요하고 접근이 어려운 공동체를 위한 정부 계획 공유 - WHO, COVAX, Gavi, VEPI, UNICED, G7, ASEAN, 각국 정부 등을 포함한 국제기구와의 인명 구조 업무 지원 및 강화 - 2021년 말 이전에 구체적인 추천 사항(recommendations) 추가
쿼드 백신 파트너십 (Quad Vaccine Partner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효과적인(safe and effective)’ 코로나19 백신 제조 공조 목표 - 미국은 기술 지원 및 자금 조달, 인도는 백신 제조역량 강화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의 역할을 맡음. - 미국은 인도의 백신 제조업체가 2022년 말까지 최소 10억 회분의 백신을 제조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약속 - 미국의 국제개발금융공사(DFC), 인도의 바이오로지컬 E(Biological E), 일본의 국제협력기구(JICA)와 국제협력은행(IBIC) 등이 주요 역할을 맡음.⁹⁾

자료: The White House(2021. 3. 12), “Fact Sheet: Quad Summit,”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3/12/fact-sheet-quad-summit/>(검색일: 2021. 3. 15).

6) U.S. Department of State(2021. 5. 28), “Secretary Blinken’s Meeting with Indian External Affairs Minister Jaishankar,” <https://www.state.gov/secretary-blinkens-meeting-with-indian-external-affairs-minister-jaishankar-2/>(검색일: 2021. 6. 9).

7) The Hindu(2021. 5. 28), “EAM Jaishankar meets top U.S. officials in Washington,”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eam-jaishankar-meets-us-officials-lawmakers-in-washington/article34663238.ece>(검색일: 2021. 6. 9).

8) The White House(2021. 5. 27), “Statement by NSC Spokesperson Emily Horne on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s Meeting with Minister of External Affairs Subrahmanyam Jaishankar of India,”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5/27/statement-by-nsc-spokesperson-emily-horne-on-national-security-advisor-jake-sullivans-meeting-with-minister-of-external-affairs-subrahmanyam-jaishankar-of-india/>(검색일: 2021. 6. 9).

- [트럼프 전 행정부와 비교] 바이든 행정부의 대인도 정책은 양국의 군사·안보 연계성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 코로나19 백신 및 의료용품 지원 등을 통한 협력 확대를 중심으로 함.
- 바이든 행정부의 대인도 정책은 군사·안보, 디지털, 에너지 협력 등 트럼프 행정부의 인태 전략을 계승하지만, △안보 차원에서 양자간 협력보다 쿼드 국가간 협력 강화 및 미국 우방국과의 협력을 높인다는 점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크게 강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커트 캠벨은 대중국 무역, 기술, 글로벌 공급망, 국제표준 경쟁에 있어 민주주의 10개국 연합체(D-10)로의 쿼드 협력 확대를 언급함.¹⁰⁾
-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행정명령에 따라 재생에너지 관련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¹¹⁾
- 이외에 인도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미국의 대인도 백신 및 의료용품 지원 등이 확대됨.

2. 분야별 주요 정책

가. 군사·사이버 안보

- [군사안보 협력]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아시아 내에서 증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쿼드를 통한 군사안보 협력 증진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¹²⁾¹³⁾
- 미국과 인도는 1992년부터 연례 군사 합동훈련을 통한 군사적 교류를 이어왔으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합동훈련뿐만 아니라, 쿼드를 통한 다자간의 합동훈련 역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표 2 참고).

9)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2019년 12월 민간 기관이었던 OPIC(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과 DCA(Development Credit Authority)의 합병으로 출범한 개발금융기관으로, 금융 제공 한도가 총 600억 달러(약 71조 원)에 이룸.

10) Campbell, Kurt M. and Rush Doshi(2021. 1. 12), "How America Can Shore Up Asian Order: A Strategy for Restoring Balance and Legitimacy,"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1-01-12/how-america-can-shore-asian-order>(검색일: 2021. 6. 9).

11) Tsafos, Nikos(2021. 2. 8), "Goeconomics without Fossil Fuels," <https://www.csis.org/analysis/geoeconomics-without-fossil-fuels>(검색일: 2021. 6. 4).

12) White, J. T.(2021), After the foundational agreements: An agenda for US-India defense and security cooperation. Brookings Institution.

13) CNBC(2021. 3. 22), "Biden administration signals India is an important partner in tackling China," <https://www.cnbc.com/2021/03/22/india-us-relations-new-delhi-is-a-key-partner-in-tackling-china.html>(검색일: 2021. 5. 13).

표 2. 최근 미국과 인도의 군사 합동 훈련 일정

구분	일시	훈련명	장소	참여국
트럼프 행정부	(1차) 2020년 11월 3~6일	말라바르 2020 (Malabar)	인도양 벵골만	미국, 인도, 일본, 호주
	(2차) 2020년 11월 17~20일		인도양 아라비아해	
바이든 행정부	2021년 1월 13~27일	시 드래곤 2021 (Sea Dragon)	태평양 괌 인근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캐나다
	2021년 2월 8~21일	유드 압히야스 2020 (Yudh Abhyas)	인도 라자스탄주	미국, 인도
	2021년 3월 29~30일	패싱 엑서사이즈 (PASSEX)	동인도양	미국, 인도
	2021년 4월 5~7일	라페루즈 ¹⁴⁾ (La Pérouse)	동인도양	미국, 인도, 일본, 호주, 프랑스

주: '말라바르'는 1992년 미국과 인도의 양국간 연례 군사훈련으로 시작되었으며, 일본은 2015년부터 참여하였고, 호주는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 하는 것임.
 '유드 압히야스 2020'은 당초 2020년 10월에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되었으며, 미국의 태평양육군(USARPAC)과 인도 육군이 참여.
 '시 드래곤 2021'에는 호주 왕립공군(RAAF), 캐나다 왕립공군(RCAF), 인도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JMSDF), 미국 앤더슨 공군(Andersen AFB) 참여.
 '패싱 엑서사이즈'에는 미국 해군(USN), 인도 해군 및 공군 참여.
 '라페루즈'는 프랑스 해군(FN)의 주도하에 진행되었으며, 호주 왕립해군(RAN), 인도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JMSDF), 미국 해군(USN) 참여.
 자료: 각국 성명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021년 3월 19일 인도를 방문한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인도 모디 총리, 라지나트 싱 국방장관 등과의 회담을 통해 미국과 인도의 군사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함.¹⁵⁾
 - 본 회담에서 양국은 인태 지역 안보를 위한 미국과 인도의 긴밀한 군사정보 교환, 병참 지역 확대 등의 방안을 언급하였으며, 양자간·다자간 군사 합동훈련 횟수를 늘려 군사협력을 증대하기로 약속함.
 - 기존에 미국과 인도는 주로 하와이 인근 해양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서아시아와 동아프리카 등지에서 군사 합동훈련을 진행함.
-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도의 러시아산 지대공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S-400'의 구매 및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의 「제재를 통한 미국 적성국들에 대한 대응법(CAATSA)」 적용을 언급하였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없음.¹⁶⁾¹⁷⁾
 - 참고로 2021년 기준 인도의 국방력은 세계 4위이며, 2021년 인도 국방부에 할당된 예산은 약 670억 달러인 가운데, 2020년 기준 인도군 장비 및 무기의 약 86%가 러시아산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음.¹⁸⁾¹⁹⁾²⁰⁾

14) Ministry of Defence, Government of India(2021. 4. 5), "Indian Navy Ships and Aircraft to participate in exercise La Pérouse," <https://pib.gov.in/PressReleaseIframePage.aspx?PRID=1709626>(검색일: 2021. 5. 13).
 15) Business Standard(2021. 3. 20), "US Secretary of Defense Lloyd Austin visits India, sends signal to China,"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current-affairs/us-secretary-of-defense-visits-india-sends-signal-to-china-121032000697_1.html(검색일: 2021. 5. 18).
 16) 2017년부터 시행된 「제재를 통한 미국 적성국들에 대한 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은 러시아, 이란, 북한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제재국과의 직접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제3국을 통한 거래 또한 규제하고 있음.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financial-sanctions/sanctions-programs-and-country-information/countering-americas-adversaries-through-sanctions-act>(검색일: 2021. 4. 20).
 17) Reuters(2021. 1. 16), "Exclusive: India's friction with U.S. rises over planned purchase of Russian S-400 defence systems," <https://www.reuters.com/article/us-india-usa-missiles-exclusive-idUSKBN29K2DO>(검색일: 2021. 5. 18).
 18) Global Fire Power - 2021 Military Strength Ranking,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php>(검색일: 2021. 5. 18).
 19) Business Today(2021. 2. 4), "'Small increase': Chinese state media takes a dig at India's defence budget," <https://www.businesstoday.in/union-budget-2021/small-increase-chinese-state-media-takes-dig-india-defence-budget/story/430294.html>(검색일: 2021. 5. 18).

- [사이버 안보 협력]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시작된 미국 내 중국 IT 기업 활동 제재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양국은 사이버 안보 공동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와 모디 행정부는 자국 내 사이버 안보를 위하여 중국 IT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향후 공동 대응방안 마련 및 대응협력 등을 통한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됨.²¹⁾
-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5개의 중국 하이테크 기업을 “미국 국가안보에 ‘허용할 수 없는(unacceptable)’ 리스크를 가져온다”고 판단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통신 네트워크 법(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Act of 2019)」에 의거하여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함.²²⁾²³⁾
 -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미연방 수출관리규정(EAR)」 개정과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통신 네트워크 법」 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중국 통신장비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였는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러한 대중국 사이버 안보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²⁴⁾²⁵⁾
- 인도정부 역시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와 5G 기술력 경쟁에 있어 중국을 견제하는 가운데, 인도 내 중국 IT 기업의 활동을 제재하는 조치를 발표 및 시행함.
 - 2020년 6월 인도정부는 「정보기술법 제69A절(Section 69A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ct)」 위반을 이유로 중국 애플리케이션 59개의 이용을 금지했으며, 당해 9월 118개를 추가적으로 발표함.²⁶⁾²⁷⁾
 - 2020년 12월 인도 라비 산카르 프라사드 통신전자정보기술부 장관은 ‘신뢰할 수 있는 통신 공급업체 목록(a list of trusted telecom vendors)’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이버 안보 및 5G 개발에 있어 본격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를 받음.²⁸⁾
 - 본 조치에 따라 인도 내 통신서비스 제공자(TSP)는 정부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비와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본 목록에 중국 통신장비 기업을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중국기업의 활동을 제지할 것으로 전망됨.

20) The Indian Express(2020. 7. 22), “86 per cent of Indian military equipment of Russian origin: Stimson Center paper,” <https://indianexpress.com/article/india/86-per-cent-of-indian-military-equipment-of-russian-origin-stimson-center-paper-6517136/>(검색일: 2021. 5. 18).

21) The Diplomat(2021. 3. 22), “The Huawei Factor in US-India Relations,” <https://thediplomat.com/2021/03/the-huawei-factor-in-us-india-relations/>(검색일: 2021. 5. 20).

22) 5개의 기업은 화웨이,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임. Reuters(2021. 3. 13), “Five Chinese companies pose threat to U.S. national security - FCC,” <https://www.reuters.com/world/us/five-chinese-companies-pose-threat-us-national-security-fcc-2021-03-12/>(검색일: 2021. 4. 26).

23)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통신 네트워크 법」은 ① 국가안보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는 통신 장비 및 서비스의 미국 네트워크 진입을 방지하는 메커니즘과 ②현재 미국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 있는 통신장비 및 서비스 이용을 제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포함. Congress,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2020. 12. 3), “H.R.4998 - 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Act of 2019,”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4998>(검색일: 2021. 5. 20).

24)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2020),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매뉴얼」.

25) 한국인터넷진흥원(KISA)(2020), 「KISA REPORT 2020 Vol.9」.

26) Times of India(2020. 12. 16), “Govt to prepare list of trusted source for purchase of telecom equipment,”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business/india-business/govt-to-prepare-trusted-source-for-purchase-of-telecom-equipment/articleshow/79758123.cms>(검색일: 2021. 4. 26).

27) 「정보기술법 제69A절」은 인도정부가 인도의 자주권(sovareignty)과 온전성(integrity), 안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자(intermediary)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음. The Print(2021. 2. 2), “All about Section 69A of IT Act under which Twitter had withheld several posts & accounts,” <https://theprint.in/theprint-essential/all-about-section-69a-of-it-act-under-which-twitter-had-withheld-several-posts-accounts/597367/>(검색일: 2021. 5. 20).

28) Reuters(2020. 12. 16), “India announces new controls on sourcing telecoms gear,” <https://www.reuters.com/article/india-telecoms-idUSKBN28Q1R8>(검색일: 2021. 5. 20).

- 2021년 5월 4일 인도 정보통신부(DoT)에서 발표한 5G 시범운영 승인기업 명단에 중국 통신 장비 및 서비스 기업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미국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중국정부와 기업의 유착관계와 그에 따른 안보위협에 대해 지적하며 인도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힘.²⁹⁾

나. 기후변화 · 신재생에너지

■ [기후변화 대응]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약속, 기후 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인도정부 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7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취임일에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이하 파리협정)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 13990호에 서명함.³⁰⁾
-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COP26)'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드러냈음.
- 2021년 4월 22~23일 미국의 주도로 개최된 기후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 50~52%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힘.³¹⁾
- 2019년 기준 인도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량 3위 국가로, 인도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³²⁾³³⁾
- 인도정부는 파리협정 준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해왔음.
- 인도 프리카시 자바데카르 환경부 장관은 2030년까지 약속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33~35% 감축목표에 대해 이미 21%를 달성했다고 밝힘.
- 또한 비화석 연료의 발전 용량을 2015년의 28%에서 2030년까지 40%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산화탄소 감소를 위한 산림 면적 증가를 약속함.

■ [기후·에너지 협력] 미국과 인도는 기후변화 대응협력의 일환으로 녹색기술 및 청정에너지 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공조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4월 8~9일 미국 존 케리 기후특사가 인도를 방문하여 모디 총리와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함.³⁴⁾

29) The Economic Times(2021. 5. 6), "US lawmakers applaud India's decision to not allow Chinese companies to conduct 5G trials,"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international/business/us-lawmakers-applaud-indias-decision-to-not-allow-chinese-companies-to-conduct-5g-trials/articleshow/82423609.cms>(검색일: 2021. 5. 20).

30) 공중보건 및 환경에 대한 보호와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과학 복원에 대한 행정명령(Protecting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Restoring Science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31) 문진영 외(2021. 5. 7), 「기후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 21, No. 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2) The Indian Express(2021. 4. 13), "Explained: What is net-zero, and what are India's objections?" <https://indianexpress.com/article/explained/why-india-opposes-net-zero-7263422/>(검색일: 2021. 5. 27).

33) Al Jazeera(2021. 4. 8), "India's Modi reaffirms Paris accord pledge in meeting with Kerry," <https://www.aljazeera.com/news/2021/4/8/indias-modi-reaffirms-paris-accord-pledge-in-meeting-with-kerry>(검색일: 2021. 4. 9).

34) Ibid.

- 모디 총리는 인도가 파리협정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신속한 녹색기술 개발 및 혁신에 있어 인·미 협력과 재정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함.
- 케리 기후특사는 인도의 산업 및 경제가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양허 재정(concessionary finance) 지원 가능성과 함께 에너지 개발에 대한 미·인 직접투자 역시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한다고 밝힘.
- 한편 인도 니르말라 시타르만 재무장관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 2021년 3월 18일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DFC는 인도 전력생산 에너지의 다변화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인도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4,100만 달러 규모의 대출보증 프로그램 계획을 발표함.³⁵⁾
- 2021년 4월 22~23일 개최된 기후 정상회의에서 인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의 지속 이행을 재차 약속하였으며, 미국과 인도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미국·인도 기후 및 청정에너지 어젠다 2030 파트너십(The U.S.-India Climate and Clean Energy Agenda 2030 Partnership)’의 출범을 발표함.³⁶⁾³⁷⁾
- 인도는 2022년과 2030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목표를 각각 175GW와 450GW로 설정한 가운데,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재차 표명함.³⁸⁾
- 또한 미국·인도의 파트너십을 통해 향후 10년간 양국의 청정에너지 혁신과 전개(deployment)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을 약속함.

다. 코로나19 대응

■ 코로나19 발발 이후 미국과 인도는 관련 물자 및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양국간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이어왔으며, 백신 제조 등에 있어 쿼드를 통한 다자간의 긴밀한 협조 역시 도모하고 있음.

- 2020년 4월 6일 미국정부는 인도 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90만 달러 규모의 공여금 지원계획을 발표함.³⁹⁾
- 미국은 국제개발처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의 기관을 통해 인도의 코로나19 대응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지원금의 대부분은 ‘Jhpiego’에 의해 시행되고 있던 국제개발처의 ‘보건 강화 프로젝트(health strengthening project)’와 인도 내 ‘WHO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임을 밝힘.⁴⁰⁾

35) USAID(2021. 3. 18), “USAID AND DFC ANNOUNCE \$41M LOAN GUARANTEE PROGRAM TO FINANCE ROOFTOP SOLAR,” <https://www.usaid.gov/india/press-releases/mar-18-2021-usaid-and-dfc-announce-41m-loan-guarantee-program-finance> (검색일: 2021. 5. 20).

36) South Asian Voices(2021. 4. 21), “India at the Leaders Summit on Climate: An Opportunity to Boost Cooperation,” <https://southasianvoices.org/india-at-the-leaders-summit-on-climate-an-opportunity-to-boost-cooperation/>(검색일: 2021. 5. 20).

37) The White House(2021. 4. 23), “Leaders Summit on Climate Summary of Proceeding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4/23/leaders-summit-on-climate-summary-of-proceedings/>(검색일: 2021. 4. 26).

38) 2021년 1월 기준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역량은 92.55GW에 이르는 가운데, 그중 태양력과 풍력이 각각 38.79GW와 38.68GW에 이룸. IBEF(2021. 5. 7), “Renewable Energy Industry in India,” <https://www.ibef.org/industry/renewable-energy.aspx>(검색일: 2021. 5. 20).

39) USAID(2020. 4. 6), “USAID PROVIDES \$2.9M TO SUPPORT INDIA’S COVID-19 EFFORTS,” <https://www.usaid.gov/india/press-releases/apr-6-2020-usaid-provides-29m-support-india-covid-19-efforts>(검색일: 2021. 5. 18).

40) Jhpiego는 1974년 미국의 존스홉킨스대학교와 제휴를 맺으면서 창립된 비영리 보건의료 국제기구로, 주로 여성과 가족의 보건의료 접근성

- 2020년 4월 11일 인도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13개국에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HCQ)의 공급을 승인함.⁴¹⁾
 - 당시 미국은 약 3만 명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등 1차 대유행을 겪고 있었으며, 인도는 총 HCQ 물량의 약 35%와 원료의약품(APIs)의 약 65%를 미국에 공급함.
- 2021년 4월 미국정부는 인도 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발생하자 대응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공급을 개시함.
 - 4월 25일 미국정부는 「국방물자생산법(DPA)」으로 국외 반출을 금지해왔던 백신 원재료 수출의 긴급 승인과 함께 치료제, 긴급 진단 키트(RDT), 산소호흡기, 개인 보호장비(PPE) 등의 공급계획을 발표함.⁴²⁾
 - 4월 28일 미국정부는 2차 성명문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2,000만 회분) △렘데시비르(2만 개) △신속 진단 키트(100만 개) △N95 마스크(1,500만 개) △산소 실린더(1,100개) △산소 농축기(1,700개) 공급 등 1억 달러 규모 이상의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9일부터 인도에 공급을 개시함.⁴³⁾⁴⁴⁾

라. 경제

- [무역]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인도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 및 인도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 중단 등 대인도 무역적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음.
 - 2020년 미국의 대인도 수출은 273억 달러, 수입은 511억 달러를 기록하며 총 238억 달러 규모의 무역 적자를 기록함(그림 1 참고).
 -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미국의 대인도 수출과 수입은 각각 343억 달러와 577억 달러였으며, 총 23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⁴⁵⁾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음. <https://www.jhpiego.org/>(검색일: 2021. 5. 17).

41) The Indian Express(2020. 4. 11), "US, Brazil on first list of 13 countries to get India HCQ," <https://indianexpress.com/article/coronavirus/us-brazil-on-first-list-of-13-countries-to-get-india-hcq-6357134/>(검색일: 2021. 5. 18).

42) The White House(2021. 4. 25), "Statement by NSC Spokesperson Emily Horne on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s Call with National Security Advisor Ajit Doval of India,"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4/25/statement-by-nsc-spokesperson-emily-horne-on-national-security-advisor-jake-sullivans-call-with-national-security-advisor-ajit-doval-of-india/>(검색일: 2021. 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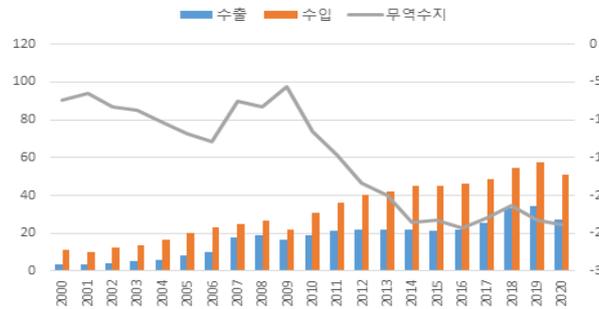
43) 노윤재 외(2021. 5. 14), 「인도의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및 전망」, 세계경제 포커스, Vol. 4, No.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4) The White House(2021. 4. 28),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Delivers Emergency COVID-19 Assistance for India,"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4/28/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delivers-emergency-covid-19-assistance-for-india/>(검색일: 2021. 5. 18).

45) USTR(2020. 10. 2), "India: U.S.-India Trade Facts," <https://ustr.gov/countries-regions/south-central-asia/india>(검색일: 2021. 5. 21).

그림 1. 미국의 對인도 무역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검색일: 2021. 5. 28).

-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1962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232조에 따른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도정부는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계획을 발표함.
 - 2018년 미국은 「1962 무역확장법」의 232조에 의거하여 인도 철강제품에 53%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인도의 철강과 알루미늄의 대미 수출량을 2017년 대비 각각 63%와 86.7% 수준으로 제한함.⁴⁶⁾
 - 인도정부는 이를 WTO에 제소하고, 농산품, 철강제품 등 29개의 대미 수입품목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조치를 발표하였으나 실제 시행은 유보함.⁴⁷⁾⁴⁸⁾
- 2019년 6월 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이 시행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대상국에서 인도를 제외하였고, 이에 대하여 6월 15일 인도는 대미 상품 관세보복 조치를 시행함.⁴⁹⁾⁵⁰⁾⁵¹⁾⁵²⁾
 - 미국 무역대표부는 2018년 기준 56억 달러 규모의 GSP 혜택을 인도에 제공하였으나 인도 낙농업과 의류시장 접근성이 확대되지 않는 것을 근거로 인도의 GSP 혜택을 공식적으로 종료하였으며, 인도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기존에 지정한 28개의 미국 상품에 최대 120%의 관세부과 결정을 발표함.⁵³⁾⁵⁴⁾

46) 「1962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리스크를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특정 수입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47) 29개의 상품은 아몬드, 사과, 호두, 콩 등의 농산품과 압연강재 등의 철강제품 등이며, 이는 약 2억 3,500만 달러 규모임. 이철원 외(2018. 9. 6),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현황」, KIEP 기초자료 18-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8) Business Standard(2018. 6. 29), "India likely to roll back higher import duties on 29 US products," https://www.business-standard.com/article/economy-policy/india-likely-to-roll-back-higher-import-duties-on-29-us-products-118062900058_1.html(검색일: 2021. 5. 21).

49)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란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일방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해주는 제도로 미국에는 1976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 개정 중임. 조미진 외(2011),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추진 방향」, p.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0) 김신주(2019. 5. 20), 「[전문가오피니언] 미국의 인도 일반특혜관세혜택(GSP) 중단의 배경과 제언」, 신홍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1) Mint(2019. 6. 16), "India's retaliatory tariffs on 28 US products comes into effect," <https://www.livemint.com/politics/policy/india-imposes-tariffs-on-28-us-goods-as-global-trade-war-heats-up-1560616982719.html>(검색일: 2021. 6. 15).

52) Shriya Chauhan, "Understanding the Impact of GSP Withdrawal on India's Top Exports to the U.S.," ORF Issue Brief No. 392, August 2020,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53) USTR(2019. 3. 4), "United States Will Terminate GSP Designation of India and Turkey,"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9/march/united-states-will-terminate-gsp>(검색일: 2021. 5. 13).

54) 2018년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위해 지정하여 발표한 29개 품목에서 '아르테미나(artemia, 새우의 일종)'가 제외됨. BBC(2019. 6. 15), "India announces retaliatory trade tariffs against the US," <https://www.bbc.com/news/world-asia-india-48650505>(검색일: 2021. 5. 24).

- [디지털세]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미국산 제품 우선구매(Buy American)’,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등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미국정부는 대인도 무역적자, 인도의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함.⁵⁵⁾⁵⁶⁾⁵⁷⁾
- 2021년 1월 미국 무역대표부는 인도의 디지털서비스세 부과가 미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이라고 지적함.⁵⁸⁾
 - 2020년 6월 미국 무역대표부는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를 검토 혹은 시행하고 있는 인도·영국 등 10개국에 대하여 「1974 통상법」 301조 위반사항을 조사함.⁵⁹⁾
 - 인도는 2016년부터 온라인 광고의 연간 매출액이 1,400달러 이상인 기업에 매출액 대비 6%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부터는 전자상거래 매출액 27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매출 대비 2%의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기 시작함.⁶⁰⁾
 - 인도의 디지털서비스세 과세 대상기업 119개 중 86개(76%)가 미국기업이며, 대상 미국기업의 연간 과세액은 약 3,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조사됨.
 - 미국 무역대표부는 인도의 디지털서비스세가 인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국제적인 과세원칙(International Tax Principles)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기업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판단하였으나, 현재 보복조치는 유예하고 있음.
- 2021년 3월 미국 무역대표부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2021 NTER)」를 통하여 미국기업이 대인도 무역에서 겪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지적함.⁶¹⁾
 - 상기 보고서에서는 인도의 높은 관세율, 수입 제한 및 수입 라이선싱 등의 비관세장벽과 기술장벽(TBT) 및 식물위생검역조치(SPS)의 문제점을 지적함.

3. 전망 및 시사점

-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인·태 전략 주요 파트너국인 인도와 안보, 재생에너지, 백신을 중심으로 협력의 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과 정부는 미·인 양국의 협력 방향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및 정책 공조가 필요함.
- 현재 미국과 인도를 포함한 쿼드 협력체는 대중국 견제를 넘어 안보, 경제, 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 동맹국인 한국의 자발적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됨.

55) 국회입법조사처(2021),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

56) 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 <https://democrats.org/where-we-stand/party-platform/>(검색일: 2021. 5. 27).

57) “The Biden plan to rebuild U.S. supply chains and ensure the U.S. does not face future shortages of critical equipment,” <https://joebiden.com/supplychains/>(검색일: 2021. 5. 27).

58) USTR(2021), *Section 301 Investigation Report on India’s Digital Services Tax*.

59) 「1974 통상법」의 301조는 미국 교역 상대국의 법, 정책, 관행, 협정 등에 ‘부당한(unjustifiable)’, ‘비합리적인(unreasonable)’, ‘차별적인(discriminatory)’ 사항이 포함되어, 미국기업의 상품·서비스·투자 활동에 부담 혹은 제한이 될 경우, 미국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 및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60) Emerics(2021. 4. 6), 「[동향세미나] 인도 디지털세(DST) 관련 재정법 개정안 통과」,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14730&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2&search_region=&search_area=&curr(검색일: 2021. 5. 27).

61) USTR(2021), *202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 따라서 한국은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 5G, 인프라, 백신 분야의 공동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미·인 양국에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쿼드 참여국을 중심으로 5G 네트워크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표준과 규범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맞추어 한국은 미국, 인도 등 관련 국가와 선제적 정책공조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협력은 인도의 산업 및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며, 정부 차원에서 인도와 고위급·실무급 대화 채널을 구축하여 양국 수요를 고려한 인프라 사업 제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인도정부는 2020년 4월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배기가스 배출기준(BS6)을 도입하여 인도 생산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상향하였으며, 최근 전기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인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450GW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태양광, 풍력, 소형 수력 등 다양한 방식의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한편 미국의 대인도 무역적자 문제, 인도의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및 인권에 관한 강경한 기조 등을 고려할 때 바이든 행정부의 대인도 정책과 협력 방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미국의 경제 회복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인도 만성 적자 및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하여 양국의 협력이 진행 중이나, 무역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임.
 - 2020년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도 방문 당시 ‘소규모 무역협정(mini trade deal)’ 체결이 기대되었으나, 농업시장 개방, 의약품 시장 가격 통제에 대한 양국간 이견으로 인해 보류되었음.⁶²⁾⁶³⁾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경제 및 사회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신규 무역협정 추진 및 체결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임.
 - 한편 인도는 최근 영국·EU와 무역교류 증대방안 및 무역협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함.
 - ※ 2021년 5월 4일 인도와 영국은 화상 방식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교역, 기술력, 국방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30 로드맵’을 채택·발표하였고, 5월 8일 인도와 유럽연합(EU)은 화상 정상회담을 통하여 인·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8년 만에 재개함.⁶⁴⁾⁶⁵⁾⁶⁶⁾
- 바이든 행정부는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를 주요 가치로 삼고 있으며,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를 자처하는 인도와 미국은 공동의 의제에 있어 민주주의적 가치에 기반을 둔 대외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도 내부의 민주주의 및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나친 개입은 양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⁶⁷⁾

62) The Washington Post(2020. 2. 27), “Trump’s India trip didn’t produce a trade deal. Here’s what did result,”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0/02/27/trumps-india-trip-didnt-produce-trade-deal-heres-what-did-result/>(검색일: 2021. 5. 27).

63) The Washington Post(2020. 3. 5), “The U.S.-India trade deal fell through. What happens now?,”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0/03/05/us-india-trade-deal-fell-through-what-happens-now/>(검색일: 2021. 5. 27).

64) Government of the U.K.(2021. 5. 4), “Policy paper: 2030 Roadmap for India-UK future relation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dia-uk-virtual-summit-may-2021-roadmap-2030-for-a-comprehensive-strategic-partnership/2030-roadmap-for-india-uk-future-relations>(검색일: 2021. 5. 27).

65)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2021. 5. 8), “Joint Statement on India-EU Leaders’ Meeting(May 8, 2021),” https://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33853/Joint_Statement_on_IndiaEU_Leaders_Meeting_May_08_2021(검색일: 2021. 5. 27).

66) 인도와 EU는 2020년 7월 15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인권, 무역·투자,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있어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2025로드맵’을 채택함. European Council(2020. 7. 15), “EU-India summit via video conference, 15 July 2020,”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international-summit/2020/07/15/>(검색일: 2021. 5. 27).

- 바이든 대통령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의 다자간 무역협정 논의 및 이행에 있어 환경보호, 노동자 권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함.⁶⁸⁾
- 한편 미국 내에서 인도정부의 카슈미르 특별자치권 박탈, 정치인 구금, 인터넷 셧다운, 무슬림을 포함한 소수 집단 차별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선거유세 당시 인도정부를 향하여 카슈미르 지역의 인권회복을 촉구함.⁶⁹⁾
- 따라서 양국 협력은 쿼드 및 우방국과의 협력하에 안보 및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 및 산업 협력은 양국간 문제적 현안의 진전상황에 따라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KIEP**

67) Madan, T.(2021. 1. 22), "Democracy and the US-India relationship," <https://www.brookings.edu/articles/democracy-and-the-us-india-relationship/>(검색일: 2021. 4. 22), Brookings Institution.

68) 국회입법조사처(2021),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

69) The Hindu(2020. 6. 26), "Biden seeks restoration of peoples' rights in Kashmir; disappointed with CAA, NRC," <https://www.thehindu.com/news/international/biden-seeks-restoration-of-peoples-rights-in-kashmir-disappointed-with-caa-nrc/article31921284.ece>(검색일: 2021. 6. 8).